

Interview



(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현) 한국국제통상학회 학회장
(현) CJ 제일제당 사외이사
(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미시간대학교 경제학 박사

INTERVIEW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과제

IPEF, 역내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위한
'프렌드쇼어링' 협의회

Interviewer: 김사헌 편집장, 양원석 시니어컨설턴트

Interviewee: 이시욱 국제통상학회/A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COVID-19 팬데믹은 발생 즉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과 경제활동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해 '리쇼어링'(reshoring)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독립적인 공급 경로를 제공하는 우호적인 국가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 네트워크인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3년차로 접어든 팬데믹 충격 속에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이 가운데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4월 13일 공식 연설에서 "핵심 원자재, 기술 혹은 생산 등에서 시장 지위를 경제를 교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지정학적 지렛대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계속해서 시장 접근성을 안전하게 확장하고 미국 경제와 교역 파트너 국가 모두의 경제 위험을 낮추어주는 공급망의 '프렌드쇼어링' 전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프렌드쇼어링이란 "세계 경제의 운영에 대한 일련의 규범과 가치를 강력하게 준수하는 국가 그룹과 협력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조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회복력'(supply chain resilience)에 대한 2021년 백악관 보고서에서 밝힌 개념이다. 당시 백악관은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주요 광물 및 의약품에 대한 회복탄력성 전략"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우호적이며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경제적 유대를 심화하고 노동, 환경,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높은 규범을 세우기 위해 '개방적인' 다자간 협정을 발전시킬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갈수록 경제 문제를 국가 안보를 포함한 국익 전반에 대한 고려와 분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친구'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핵심 의제 속에 프렌드쇼어링을 장착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자국 산업 전체나 공급망을 만들 수는 없지만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공급망 시야를 개선하며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및 공급업체와 연결을 강화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

지난 2021년 호주, 인도, 일본 무역장관이 모여 인도태평양 역내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공급망 회복력 이니셔티브'(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SCRI) 도입을 약속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딜로이트인사이트 편집국은 국제통상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과 IPEF의 역할에 대한 분석과 함께 회복 탄력적이며 민첩한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

Q 지난 2월 1일, 한국에서도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옛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했지만 트럼프 정부시절 TPP 탈퇴 후에, 미국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도 다시 새롭게 명명된 '포괄적·점진적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복귀하기 보다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가 한국 기업의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미래 대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IPEF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과 협력 플랫폼이 절실한 상황이나, CPTPP에 대한 재가입이 국내 정치여건이나 여론 상 여의치 않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IPEF 추진에 탄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IPEF에서는 ①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② 탄력적 공급망 구축, ③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화, ④ 공정 조세 및 반부패 등 4개 의제를 중심으로 국가 간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제들은 기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신 통상 의제로서 다자간 체제 내에서도 지속 논의되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COVID-19 팬데믹 사태에 따라 국가 간 무역마찰, 공급망 교란 등이 가시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의제들입니다. 따라서, IPEF는 전통적인 관세 및 비관세장벽 축소에 초점을 둔 CPTPP, RCEP 등 기존 무역협정을 대체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보완하는 협의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공급망에 연관된 수출의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약 48.6%로서 일본의 34.4%, 미국의 37.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들에 비해 수입한 중간재를 활용하는 수출의 부가가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화는 더욱 절실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EU를 중심으로 역내 공급망 안정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아태 지역에서는 국가 간 이질성, 지경학적(Geo-economics) 여건 등의 요인

들로 인해 뚜렷한 협의 채널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IPEF는 역내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첫 번째 다자간 협력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각에서 IPEF를 중국을 배제하려는 경제판 '쿼드'(Quad)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중국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지만, IPEF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중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기 보다는 중국 발 공급망 리스크를 완충하는 대안들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IPEF 출범은 적어도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는 한국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큼니다.

유럽지역 국가들이 EU라는 공동체 내에서 많은 산업 이슈를 논의하듯 IPEF를 통해 아태 지역 국가들 간 다양한 어젠다를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더 구축된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아태 지역 국가 간 기술 표준 정립 등 국제적 어젠다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망 이외의 의제들, 특히 공정무역, 공정조세 및 반부패(IPEF 1번, 4번 어젠다)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민감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의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규범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지켜보면서 정부는 실익에 기초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IPEF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어젠다에 동의하고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Q 한국이 IPEF에 참여할 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있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PEF는 이제 막 출범 단계이며 아직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한 IPEF의 4개 주요 의제의 세부적인 규정, 규범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거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는 말 그대로 한국이 군사적으로 실제 사드를 배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중국 정부 당국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IPEF 참여에 대한 항의성명은 지속적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이 IPEF에 참여한다고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의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입니다. 또한 IPEF에 참여 예정인 국가들 대다수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공급망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를 단절시키는 형태의 공급망 재구축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IPEF는 '다자' 간의 경제 협력체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IPEF 참여국에게 중국과의 경제 협력, 통상 관계를 단절하라고 압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Q 말씀하신 대로, IPEF는 아직 구체화, 실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통상 규범, 공유 가치 측면에서 미국이 높은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11월에 예정된 미국 중간 선거 등 국내 여건 변화에 따라 미국이 자신이 구상한 IPEF를 제일 먼저 탈퇴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참여국에게 실익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IPEF는 세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주요한 협력체 기능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의의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우방국, 동맹국과의 '프렌드쇼어링'을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경제, 통상 안정성을 증대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미국의 경우 글로벌 무역 협정 참여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현 단계의 IPEF는 의회의 승인이 아닌 단순 행정 명령에 의해 추진 중이므로 추후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모멘텀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다만 미국이 IPEF를 탈퇴하여도 과거 TPP의 사례와 같이 논의의 범위를 디지털 무역, 공급망 안정화, 인프라 협력 등으로 축소한 후 아태 지역 국가간 협력 논의 창구로 남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쿼드'라고 일컬어지는 경제, 안보 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제적 이슈로 인해 기존의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며 우방국, 동맹국의 소수의 기업들끼리 연합하여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른바 '프렌드쇼어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 산업, 무역, 안보 분야에서 미-중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편에 설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끊임없이 민첩한 대응을 해 나가야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IPEF를 중국 배제형 경제판 '쿼드'로 인식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급망 교란은 중국뿐 아니라 아태 역내 혹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커질수록 경제 운용에 대한 기본 철학 및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한 프렌드쇼어링이 확대되는 현상은 지극히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자의적으로 공급망을 교란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한-중 양자 관계가 아니라 IPEF를 매개로 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의 IPEF 참여의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IPEF의 경우 이제 막 출범하는 단계여서 각 의제별로 국가 간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무역협정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관련된 국제 규범이 미흡하거나 부재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강제성을 갖는 규범의 확립 및 적용은 당분간 요원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대중 공급망에 대한 국가 간 이해관계가 매우 상이하고 복잡하다는 측면에서 다수의 회원국들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미국의 경우 의회의 승인이 아닌 단순한 행정명령 형식으로 IPEF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IPEF 내에서의 논의가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탈퇴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Q 최근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팬데믹, 탄소중립 이슈 등으로 기업들에게 공급망 리질리언스(resilience, 회복력)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공급망의 리질리언스를 높인다는 것은 기업들에게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최근 3개월간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공급망 리질리언스를 높이는 과정에서 기업의 비용이 더 높아지고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비용에는 단기 비용과 장기 비용이 있습니다. 공급망 리질리언스를 높이는 과정에서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의 영업 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3년간 겪은 공급망 교란 및 붕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을 고려하면, 리질리언스 증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무역적자는 주로 공급망의 '병목(bottleneck)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돈은 많이 풀려 수요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 반해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각종 수입물가가 급등하여 무역적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무역적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에 기초한 세계화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글로벌 통상 환경이 대 전환의 분기점에 온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또 향후 거시적 통상 환경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국제사회는 시장경제의 기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시대 사조였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규제 완화, 민영화, 자유화 등이 강력히 추진

되었으며 국제 통상 역시 효율성, 개방성, 보편성에 기반한 다자주의적 자유무역 기조가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산층 실질소득 정체 및 소득 불평등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및 불확실성 확대, IMF와 세계은행 등의 주도로 추진된 중남미·아프리카 국가들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실패, 중국과 인도의 정부 주도형 성장전략 성공 등을 경험하면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통상 측면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국제적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특히, 미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 통상·기술 패권 경쟁 문제를 대선 과정부터 적극 부각시키고, 이후 관세 인상,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등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도래했다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국가 간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많은 국가들이 국제 규범을 따르는 환경에서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경제 측면의 불확실성 및 교란 요인이 많고 경제적 편익 이외의 정치, 외교, 안보 상의 전략적 가치가 개입되는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은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는 당분간 요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안보의 개념이 부각되다 보니 모든 국가 간 경제 관계를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나 양자 택일의 문제로 사고하는 방식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무역은 해당 국가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래라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제반 국제 정치경제적 여건들이 이와 같은 상호 호혜적인 국제무역을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편,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를 탈세계화(degloabalization)나 세계화 속도의 감소(slowbalization)가 아닌, 세계화의 성격이 바뀌는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즉 세계화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통상 환경 변화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Q 위에서 언급하신 대로 디지털 통상이 향후 통상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EU는 제한적 범위 내의 자유로운 이동, 중국은 데이터 국경 간 이동의 엄격한 제한 및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디지털 통상 정책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에 대해 회원국으로 가입, 참여를 추진하며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15일에는 한국-싱가포르 간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KSDPA)이 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례와 디지털 통상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여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는 항상 상충관계(trade-off)가 있습니다. 지나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선 한국이 DEPA에 가입한 이후 국가 간 법 체제, 규정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미국의 정책 기초를 따를지, EU의 기초를 따를지 혹은 제3의 길을 가야하는지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IPEF를 디지털 통상 관련 논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EU는 이미 역내 협의회를 만들고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통상 어젠다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태 지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IPEF가 디지털 통상 관련 협의의 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Q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규범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제조업, 수출 기반 한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잘 대응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국 기업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ESG는 기존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초의 문제점 및 반성에서 출발한 민간기업 측면에서의 대응이라 평가

합니다. 단기적인 재무 성과에 초점을 두어 온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용성을 기반으로 환경, 지배구조, 노동, 인권 등 비재무적 가치를 기업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번영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입니다. 2005년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PRI)이 발표된 이래 기업에 대한 투자, 공급망 구축, 정부 조달, 금융 조달 등 다양한 측면에서 ESG 원칙의 준수가 기업활동의 주요한 환경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사내에 ESG 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상황입니다만, 적지 않은 도전 요인들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대기업의 경우 고질적인 기업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재무적 성과가 우수하더라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ESG 준수 대상이 대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협력 하청업체로 확대되어 가고 있어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 수준의 ESG 대응이 불가한 반면 기업활동 및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핵심 이슈 위주의 선별적인 ESG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ESG 평가지표의 개발 및 개선을 지원해야 합니다. 기존의 ESG 평가지표의 대부분은 대기업 혹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중소기업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ESG 관리의 중요성을 중소기업 경영자들에 지속적으로 인지시키는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 역시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개입 없이도 민간 스스로가 ESG 원칙을 준수하면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생태계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Q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그리고 기업들이 함께 ‘글로벌 공급망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공급망 리질리언스 역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민관협력을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간기업

과 정부 간의 긴밀한 정보 교류, 소통 및 협력채널 구축에 있습니다. 정부는 전략 핵심 품목을 선정하고 공급망 현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는 있으나, 지난번 '요소수 사태'에서도 경험했듯이 공급망 교란은 산업 어느 부문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 간 부문에 있어서의 정부 부처, 산업별 협회, 민간기업들 간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소통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공급망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다니 로드릭(Dani Rodrik) 교수에 따르면, 민간기업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요인들을 동시에 완화시키는 현대판 산업정책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조직 규모 및 인적 구성, 제한된 정보 및 데이터 접근 권한, 분석 역량,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보다 전향적인 대응체계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Q 한국 주요 전략 산업(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고 한국의 제조 기반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경상수지라는 것은 무역수지만 구성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수출이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선(善)이고, 수입과 해외직접투자 유출은 악(惡)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함으로써 소득 수지가 늘어날 수 있고, 해외 진출국 현지의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 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핵심 제조 기반은 국내에



유지시켜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내 제조 기반이 다양한 신 기술 도입의 실험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마지막으로 통상 질서와 공급망 격변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에게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국제무역과 직접투자 활동도 전반적으로 하락 혹은 정체세가 이어지면서 탈세계화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거진 공급망 교란, 국제 교역의 급락 등으로 지금까지의 세계화는 이미 종언을 고했다는 얘기가 곧잘 들립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세계화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세계화는 디지털 서비스, R&D, 데이터와 지식에 기반한 국제교류 확대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촉진의 주요한 기제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업의 성패는 디지털 경제에 얼마

나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 거래 양태, 가치사슬 창출 방식, 시장 및 경쟁 구조 등 경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견인할 것입니다. 향후 무역거래도 점차 디지털화되면서 기업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기회와 도전요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령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무역의 디지털화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 향상,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 제품·서비스 혁신 촉진 및 생산성 제고 등의 기회요인을 제공합니다.

반면, 플랫폼 의존성 심화에 따른 소비자 인터페이스 및 고객 충성도 축소, 플랫폼 운영자의 데이터 지배력 강화로 인한 혁신 기회 상실, 기업정보의 유출, 높은 플랫폼 전환 비용 등은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기업들은 이 같은 기회와 도전 요인을 파악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기업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 추진해야 새로운 통상질서 및 이에 따른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Interview



-OECD Forum
and Business Innovation

OECD 공동포럼

Balroom(2F), COEX

OECD



(현) 산업연구원 산업정책본부장
(현) 외교부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
(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정책자문위원
코넬대학교 경제학 박사

INTERVIEW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과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하고 리질리언스(resilience) 제고해야

Interviewer: 김사현 편집장, 양원석 시니어컨설턴트

Interviewee: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본부장

세계적으로 2년 넘게 지속되어온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수많은 기업들이 원자재, 원재료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물류 병목현상에 직면하면서 큰 손실을 입어 왔다. 이에 더해, 미-중 기술/패권경쟁, 러-우 사태와 각종 원자재값 상승, 미-러 신냉전 시대 도래 가능성, 탄소 중립을 포함한 ESG 이슈,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물류 중단 사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법안 추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구조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2022년 2월 1일 우리나라에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었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했지만 트럼프 정부 시절 이를 탈퇴했고,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복귀하기 보다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구상했고 한국도 IPEF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이러한 국제 통상 질서 변화도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한국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달로이트인사이드 편집국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혼란 속에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공급망 위기가 일시적 문제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구축해 나가야 하는지 등 한국 기업들의 단기, 중장기 대응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산업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관련 전문가인 이준 산업연구원(KIET) 산업정책본부장의 명쾌한 분석과 제언을 들어봤다.

Q 미-중 기술/패권경쟁, 러-우 전쟁과 각종 원자재값 상승, 미-러 신냉전 시대 도래 가능성, 탄소 중립을 포함한 ESG 이슈,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물류 중단 사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법안 추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단기적인 이슈로 미미한 수준에서만 영향을 끼칠 요인과 장기적,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기업들에게 공급망 위기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보통은 가격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 시장 기능에 의해 공급망 이슈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공급망 위기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에 의해 공급망 교란의 강도가 심화되고 범위가 넓어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은 상황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병목 현상(bottleneck)이 2~3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올해 초반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각종 공급망의 수급 상황을 더욱 불균형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팬데믹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세계 주요 기업들은 생산, 물류 측면의 '락다운'(lockdown)을 극복하지 못하고 '캐파'(capa, 생산수용능력)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빨리 회복이 되었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병목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노동 공급 부족사태 지속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생산 거점의 두 축이 중국과 아세안(ASEAN)인데,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물류 거점 도시가 봉쇄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며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기업들은 적시에 원자재를 공급받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평균 '리드타임'(lead time)도 상당히 길어져 생산, 판매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4~5배 정도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여러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영향력이 큰 것일 뿐, 사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팬데믹이 안정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며 해소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그 속에 잠재되어있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현재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 일본의 경제안전보장법안 추진, 탄소중립 이슈 등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을 계속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첨단 기술을 '전략자산화'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년 넘게 이어져오던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분기점에 이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Q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가 한국 기업의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미래 대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통상 질서의 변화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의 핵심 시사점 중 한 가지는 한국과 일본 간의 FTA가 하나의 형태로 체결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전과와는 다른 새로운 무역질서가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것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입니다. IPEF는 기존의 자유무역 협정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슈입니다. 보통의 무역 협정은 관세 장벽을 상호 포괄적으로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IPEF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안은 ▲무역의 공정성 ▲공급망 회복탄력성 ▲청정에너지, 탈 탄소화 ▲조세 및 반부패 협력 등입니다. 이는 전통적 경제 원리를 넘어 '가치'가 포함된 어젠다입니다. 즉 단순히 관세를 조정하여 자유무역을 촉진시키는 목표를 넘어 미래지향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무역 질서에 대한 투명성, 개방성, 포용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산업, 제품 경쟁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변화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특정 기업과 그 기업의 상품이 중요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IPEF에 가입한 상태로 앞으로의 논

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명하거나 개방적이지 않은 국가 혹은 기업과 공급망을 구축한 경우 공급망을 바꾸거나 다변화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어젠다에 대해 IPEF에 참여하기 보다는 일부 핵심 어젠다에 있어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PEF와 RCEP 등의 통상무역 질서의 변화는 결국 진행형인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Q 미-중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에 설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끊임없이 민첩한 대응을 해 나가야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한국 기업과 정부가 미국, 중국 중 한 편을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는 시점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중국에게 모두 한국은 경제, 안보, 첨단 산업 공급망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대상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 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측면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DRAM)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고, 현재로는 그 어느 국가도 한국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장비 없이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한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수요는 중국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분야 협력이 약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의 중국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결국 반도체도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 등 완성품을 생산하는 IT산업이 있어야 수요가 생기는 것인데, 이런 대규모 IT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로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할 잠재적 문제는 중국과 반도체 관련 통상 마찰이 발생할 시 중국이 '비대칭 보복'을 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반도체로 시작된 통상, 외교 이슈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중

대한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사드(THAAD) 이슈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과 마찰이 생길 시, 유사한 경제보복조치 인해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수많은 중간재 확보가 어려워지고 기존의 공급망이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부분에서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도체에서 시작된 악영향이 철강, 화학, 건설 산업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지난 3월 한국, 일본, 대만 정부에 '칩 4 동맹' 결성을 제안하며 반도체 분야 협력을 제안해 왔습니다. 철저히 공급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반도체 생산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이 동맹에 참여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맹 내에서도 국가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DRAM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글로벌 팹리스(fabless) 기업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글로벌 팹리스 기업은 미국 기업이기에 때문에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만 한국이 추구하는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Q 탄소중립은 글로벌 공급망을 크게 변화시킬 한 축입니다. 그린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대외 여건 변화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기술하신 바와 같이 1) 석탄 사용 감축에 따른 전력난 및 이에 따른 단기적 공급 충격, 2) 탄소를 원료로 하는 제품의 공급 감소, 3) 핵심 공정 중간재 부족, 4) 탄소중립관련 유망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중간재 공급 충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에 대비해 국내 주요 기업 입장에서 취해야할 선제적 대응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탄소중립 로드맵은 2050년을 기한으로 두고 있는 장기적 로드맵입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 탄소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런데, 탄소중립과 친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급망의 '발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작년에 경험한 요소수 부족 대란을 겪었는데 이 역시 일종의 '공급망 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에서 언급한 4가지 공급망 위협 경로는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일 뿐이고,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경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데 그 지역이 석탄 발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 중국 지방 정부의 예기치 못한 환경 정책에 따라 기존에 구축해 놓은 공급망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공급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나가야 합니다. 즉 원/부자재를 어디서 어떻게 조달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국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사의 공급망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벤더 등 협력사의 공급망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그네슘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들이 아니라 대기업의 물건을 공급하는 2차, 3차 벤더인데, 인력과 역량이 풍부한 대기업이 아닌 이상 중소기업의 담당자가 일일이 중국의 탄소 관련 정책과 규제, 자연 재해 이슈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급망 위기는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국제적 법 제정이나 후속 지원 정책을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각종 협회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정책적 수요를 면밀히 취합하여 정부와의 소통해야만 효과적인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분산해서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Q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수혜를 받는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의 공급망 구축 혹은 관련 장비 산업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볼보 그룹은 지난해 10월 녹색강철로 만든 세계 최초 전기 트럭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분야가 향후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분야에 진출하여 신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성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러한 분야는 유망 사업 분야 차원을 넘어, 한국 기업들에게 생존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확장을 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즉 무조건 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탄소 중립, ESG경영, RE100 등이 최근 기업들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제품을 만드는 방식도 친환경적인 공정 구조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품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탄소 중립형 신산업이 다양하게 등장할 것이고 이러한 신산업의 특징은 초저전력, 초고용량, 초고밀도의 소재, 부품, 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이 분야가 자연스럽게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철강 산업도 2050년까지 공정을 '수소환원제철공법'으로 바뀌어 되는데 이러한 기술을 개발, 확보하지 못하는 기업은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탄소저감 및 친환경 관련 소재, 부품, 장비 및 기타 신산업은 유망 분야를 넘어 기업과 국가의 사활이 걸려 있는, 반드시 개척, 확장해 나가야 하는 신 산업 분야입니다.

Q 최근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한국 정부가 협업하여 인도네시아에 자동차 및 배터리 생산 거점을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사례를 공급망 분산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향후 이와 유사한 공급망 분산 관련 민간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가능한 산업 혹은 분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대자동차는 새로운 인구대국 인도네시아 소비 시장을 개척하고 아세안과 호주 지역 수출을 위한 생산 거점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

리 생산에 필요한 니켈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적합한 국가입니다. 공급망 분산 측면에서 보면, 현재 한국의 배터리 글로벌 경쟁력은 글로벌 2위이고 중국이 1위입니다. 배터리 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재료로 쓰이는 광물의 확보입니다.

현재는 니켈을 비롯한 리튬, 코발트, 망간 등의 배터리 원재료 수급을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이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도 중국의 배터리 공급망 파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배터리 생산 원료를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소상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100% 대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도 배터리 원재료 확보를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며 동시에 지렛대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공급망 대안 거점을 만들어 가는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거시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수요를 커버하는 다양한 산업의 대기업이 공급망 분산을 위해 새로운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함께 협업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해외동반진출을 하는 프로젝트를 더 많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Q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그리고 기업들이 함께 ‘글로벌 공급망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조직 설립과 함께 정부와 관련 기관이 한국 기업의 공급망 리질리언스 역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민관협력력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또한 박사님께서 보고서에서 언급하신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차원에서 투자해야 하는 분야 혹은 기술은 무엇입니까?
리질리언스가 최근 2년~3년 사이에 공급망 관련 가장 큰 화두입니다. 과거에는 공급망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즉 원재료 조달 비용을 낮추고 최종 생산품 가격을 낮추는 것이 기업들에게 최우선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급망이 길어지고 복잡해졌

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망이 길면 길수록 관리가 어렵습니다. 공급망 리질리언스를 높인다는 것은 결국 일정 수준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공급망을 짧게 구축하고 다변화하며 최대한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급망 충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정부의 역할이고, 그런 맥락에서 조기 경보 시스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의 공급망 구조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기경보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 부문의 경우, 주기가 짧은 다양한 거시지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 위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은 실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 통제하기 매우 어려운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간 상당히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기업과 정부간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로는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 나가면서 공급망 위기관리 경험을 축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에서 축적되는 경험치를 면밀히 기록하고 데이터화 하여 ‘매뉴얼’을 만드는 것입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을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운영해봐야 합니다.

Q 기업의 입장에서 최고 공급망 책임자(CSCO)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급망 관련 민관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CSCO가 가져야할 역량은 무엇입니까?

현재 시점에서 CSCO가 가져야 될 역량은 무조건 많은 재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기업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본 결과 실제로도 많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최대한 원재료 재고를 많이 쌓아 두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공급망의 가시성(visibility)을 제고하기 위한 공급망 관리 디지털화(digitalization)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 가시성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서 기업들이 취해야할 다음 미션은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즉 흔히 이야기하는 기업 연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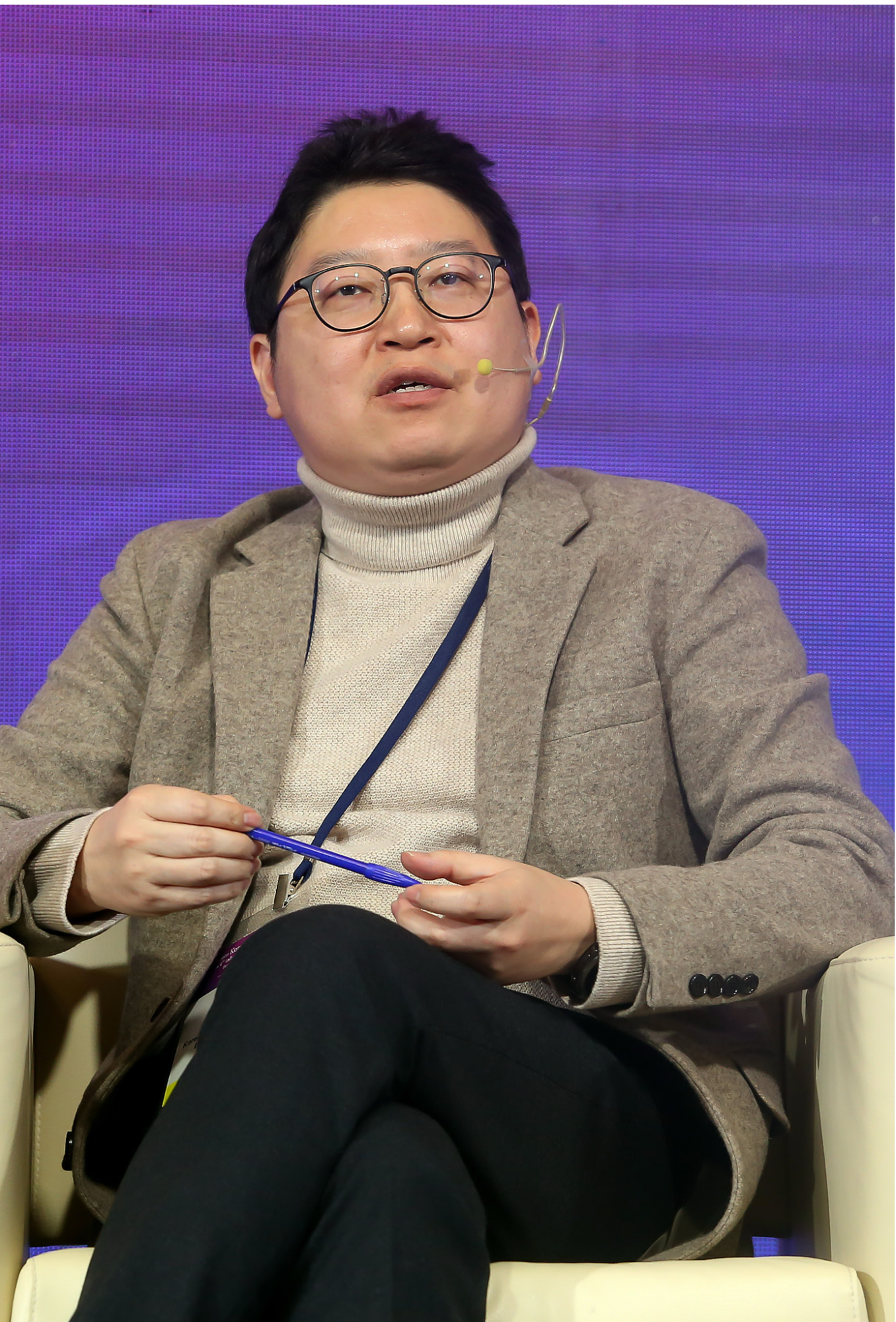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자체적 역량으로만 해결하기 힘든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부도 기업들이 처한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와 민간 협단체가 협력하여 신설운영하고 있는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공급망 격변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에게 제언 부탁드립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발 물류 대란 등은 단기적인 공급망 위협 요인입니다. 이는 상황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반면 장기적인 요인 즉, 미-중 기술/패권 경쟁, 탄소 중립 이슈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의 핵심은 2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산업별, 기업별로 공급망 변화 요인에 노출되는 정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어떤 이슈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 점검, 평가해야 합니다. 지난 2~3년간,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팬데믹, 요소수 대란 등의 공급망 문제를 연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급망 관리 역량도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수립 중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각종 협단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기업 단독으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종별 협회, 대한상의 등과 같은 협단체를 중심으로 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nterview



(현) 와세다대학교 국제학술원 교수
(전) 코쿠사이 대학교 교수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박사

INTERVIEW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과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산업 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가능

Interviewer: 김사헌 편집장, 양원석 시니어 컨설턴트

Interviewee: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

여러 국제적 이슈로 인해 기존의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며 기업들은 우방국, 동맹국의 소수의 기업들끼리 연합하여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른바 '프렌드쇼어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쿼드(QUAD)'라고 일컬어지는 경제, 안보 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한편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5월 11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안전보장전략은 공급망 강화, 기간 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민관기술협력, 특허출원의 비공개화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주요 소재, 부품 등을 전략물자화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률 개정과 함께 일본은 반도체 강국의 지위 회복을 노리고 있다. 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설계, 개발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 TSMC가 일본에 투자를 결정하며, 대만과 일본의 반도체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과거 일본의 반도체 원료 수출 금지에 대응하여 한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강화 정책을 통해 일본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췄고 한국과 일본의 산업협력은 예전에 비해 매우 약화된 상황이다.

한국의 신정부 출범과 함께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 조금이나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산업, 정치 분야 전문가인 와세다대학교 박상준 교수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한국 기업 및 정부의 대응방안, 한국과 일본의 미래 산업 협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Q 지난 2월 1일 한국에서도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었습니다. 미국은 옛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했지만 트럼프 정부시절 TPP 탈퇴 후에, 미국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도 다시 새롭게 명명된 '포괄적·점진적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복귀하기 보다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가 한국 기업의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미래 대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빠른 시일 내에 급격한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IPEF는 완전히 새로운 발상이나 제안이 아닙니다. 일본은 2016년부터 '자유로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외교 방침을 고수해 왔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추구하는 동맹국들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인도를 중시하는 입장의 외교 방침입니다. 쿼드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제안한 IPEF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견제, 차단하기 위한 시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IPEF는 이 지역 정부나 기업에 큰 충격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 대부분의 아세안(ASEAN)국가가 RCEP에 가입해 있고, 이들은 중국 시장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RCEP에 미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일본 기시다 정부조차도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라는 이름으로 경제에서는 중국과의 교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IPEF로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IPEF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맹국을 늘리는 것이, 특히 아세안 국가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큰 인센티브는 미국 시장의 개방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의회가 통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통상 룰을 구축하려고 해도 관세 철폐처럼 의회의 통상 권한에 저촉되는 내용의 협정은 의회의 승인 없이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의 개방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제이고, 아세안 국가들을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를 가진 IPEF의 발효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없습니다. 반면 중국의 CPTPP 가입 의사 표명은 아세안 국가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IPEF는 현재의 질서를 크게 변화시킬 수 없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체화될 IPEF의 내용과 중국의 대응(추가적 개방이나 CPTPP 가입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면 됩니다.

참고를 위해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일본에서는 RCEP을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 질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RCEP 자체가 일본과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미국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IPEF도 RCEP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상하는 프레임워크이긴 하나, 아직 RCEP만큼 구체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동등한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두 경제협력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Q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쿼드'라고 일컬어지는 경제, 안보 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제적 이슈로 인해 기존의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며 기업들은 우방국, 동맹국의 소수의 기업들끼리 연합하여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른바 '프렌드쇼어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중 일방의 공급망에만 집중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 주요 기업들이 이에 대해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까?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협력망에 협조하면서도 동시에 기업 차원에서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은 한-중간 완전한 결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기업도 전기차 등 유망 분야에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 협력망에 한국이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의 보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전례 때문에 한국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기업들의 탈 중국 러시가 지속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중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역시 한국, 일본 및 ASEAN 국가와의 경제 협력이 약화,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과 유사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국제정치, 국제관계 측면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서방국 편에 서지만, 민간차원의 경제 분야에서는 끊임없이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중 경제협회는 한-중 경제협회와 비교했을 때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고 주요 인사들의 영향력도 훨씬 높습니다. 미국, 유럽과 공조하면서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중국 시장 진입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중국 역시 일본이 미국 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오히려 공고히 하기 원합니다. 한국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참여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균형 있게 유지,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단,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에 설 것이라는 선언적 시그널을 주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프렌드쇼어링'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미-중 대립과 팬데믹 등으로 기존의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자 프렌드쇼어링의 역할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렌드쇼어링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큰 프로젝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렌드쇼어링으로 기업이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만 기업 TSMC, 일본 기업 소니(Sony)와 덴소(Denso)가 공동출자한 반도체 공장이 일본 구마모토에 건설 중입니다. 설립 비용 1조 엔 중 4,000억 엔을 일본 정부가 지원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성사되지 못했을 프로젝트입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로직 반도체는 소니의 이미지 센서, 덴소의 자동차 부품 등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의 소재가 이 공장에 납품됩니다. TSMC공장의 설립으로 일본 소재기업-TSMC-소니와 덴소로 이어지는 공급망 파트너십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TSMC-SONY 공장은 1,700명 정도를 고용할 예정이고, 간접 고용 파급효과는 10,0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파급효과와 조세 수입을 고려하면 4,000억엔의 지원금에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와 업계의 판단입니다.

Q 말씀하신대로 대만 TSMC가 일본에 투자를 결정하며, 대만과 일본의 반도체 동맹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어떻게 접근, 대응해 나가야 하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훼손된 상태에서 일본이 대만 TSMC와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반도체 연구 분야에서 일본과 미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러 국가의 다양한 기업과 소위 말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거대 반도체 기업들이 있고 이 기업들에게 주요 소재,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본, 대만과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에 한국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삼성전

자와 일본의 소재, 부품 기업의 합작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도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공급망 리질리언스(resilience)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삼성이 일본기업 샤프(Sharp)에 출자하며 상호 협력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전례를 참고하여 어렵지 않게 협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Q 반도체 원료 수출 금지에 대응하여 한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강화 정책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향후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될 시, 이러한 정책과 기업의 대응은 어떻게 변화해야 합니까?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일부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급망은 일본을 포함한 타국과 적극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의 소재 공급망의 시작점은 광산입니다. 아프리카, 남미, 호주, 중국 등지에 많은 광산들이 분포하는 반면 한국에는 이러한 광산이 아예 없거나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망을 완전 자립화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과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혹은 타국 기업과 협력하여 제3국의 광산 등에 지분을 투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 기업과 정부가 주요 산업, 소재별로 공급망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가 면밀히 파악하고 글로벌 공급망 확장을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해외합작투자를 추진해야 합니다.

Q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 미국과 서방 세계 연합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연합 간 세력 대결, 냉전 구도가 다시 형성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이에 중국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미국은 경제, 공급망 측면에서의 중국 봉쇄 전략의 강도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십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정치, 국제 관계를 아우르는 분야이므로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일본의 사례와 일본의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1980년대에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성장하여 미국의 메모리반도체 산업을 능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미래첨단산업의 중심이 되는 반도체 패권만큼은 일본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 일본에 통상압력을 가했고 이에 굴복한 일본은 1986년에 미·일 반도체협정에 서명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서명 이후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유사한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 일본의 전례처럼 첨단 산업 패권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러·우 사태 관련하여 군사적, 외교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해 나가고 있는 양상처럼 경제, 산업 측면에서도 양국이 서로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선에서 타협을 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Q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모범적으로 잘 대응했다고 볼 수 있는 일본 사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0년 일본과 중국 간 발생한 희토류 분쟁입니다. 당시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으로 인해 중국은對일본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관광 금지조치 등 전방위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희토류는 전자제품 필수 소재로 당시 중국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했던 상황입니다.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낮춰 나갔고 중국 이외 국가로 수입망을 다변화하고 희토류 광산에 적극 투자하며 호주, 인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에서 희토류 개발권을 획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상사들이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소지쓰(双日)가 2010년 11월 일본 정부기구인 JOGMEC와 공동으로 2억 5,000만 달러를 호주의 희토류 생산업체인 라이너스(Lynas Corporation Ltd.)에 출자하는 등 일본의 주요 상사들이 재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뿐만 아

나라 민관학이 협력하여 희토류 채굴, 생산, 가공 관련 기술 수준을 높인 것도 희토류 분쟁에서 일본의 승리를 이끌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히타치(Hitach)는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 모터를 개발해냈는데, 이 바탕에는 이미 2007년부터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행한 것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희토류 분쟁 이전인 2007년에 이미 착수한 '원소 전략 프로젝트'에는 20여 개 대학과 기업이 참여했고 2010년 이후 희토류 대체재료 개발에 그 연구성과가 응용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서 일본은 각 종 협회를 조직하여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다양한 분야의 협회를 신설하고 조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기구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일본 정부는 리쇼어링(reshoring) 촉진 정책을 집행해왔고 이 결과 2010~2017년간 동안 총 7,000여개의 기업이 일본으로 복귀했습니다.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의 리쇼어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만일 한국정부의 규제완화가 이뤄진다면, 현재의 대내외 시장환경을 고려할 때 실제로 유의미한 수준의 한국기업복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한 사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주요 일본 기업들의 해외 생산, 해외판매의 비중은 이전보다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공급망의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해외 생산, 해외 판매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본의 경우, 공급망 문제뿐만 아니라 환율 리스크를 헷징(hedging)하기 위해 해외 거점 기반을 넓혀왔고 지금도 더 넓혀가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리쇼어링 보다는 해외 공급망 및 판매 거점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본의 인구 감소 추세를 봐도 리쇼어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미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었고 한국도 일본의 추세를 따라갈 것입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소비 시장의 축소를 의미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 정책은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쇼어링 보다는 반대로 한국의 주요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해외 기업들의 공장, 연구소 등을 한국에 유치한다면 일자리 증대, 세수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Q 최근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전략은 경제 책략, 자국내 공급망 강화대책, 쿼드 공급망 구축 협력 등 3개 분야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나 분야별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수출 통제, 반도체 및 첨단 배터리 등의 전략물자화, 쿼드 4개국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한국 경제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혹은 미미한 수준의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생각하십니까?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지난 5월 11일에 일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공급망 강화, 기간 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민관기술협력, 특허출원의 비공개화 등).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제안전보장전략은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차원에서는 고려해야 할 제약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과거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사례와 같은 통상조치를 시행하기 더 용이하게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특별히 한국에 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중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본 법안이 통과했다고 해서 한국 기업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Q 일본의 경제안전보장법 추진 과정에서 일본 내 주요 기업들의 반발이나 기타 이슈가 있었습니까?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추진, 도입 사례를 한국은 어떻게 벤치마킹 해야 하나요?

반발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전략적 물자와 기술을 보호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본 법이 시행될 시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 활동이 조금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국가 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과 장비를 해외로 수출할 시 매우 엄격한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첨단 기술을 다루는 연구원들의 해외 이동에 제약 조건이 생기는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특허출원에 제약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 경제안보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의 사례처럼 수차례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 조직 간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협회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기업 규제의 차원이 아닌, 국가의 경제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안보법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경계하는 것처럼 주변국의 경계를 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법이나 상호 대칭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Q 일본의 경제안전보장법 추진에 따라, 과거 북한 국 반도체 원료 수출규제조치로 인해 발생한 공급망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예기치 못한 이슈가 돌발하지 않는 한, 2019년에 있었던 수출규제와 같은 조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앞서서도 말했지만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 협력망에 함께 있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합니다. 둘째, 기시다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모두 한일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수출 규제로 일본이 얻은 실익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일본 기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넷째, 일본의 경제안

전보장추진법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일본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켜 자국의 공급망을 훼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Q 미국이 주도하는 IPEF와 쿼드 4국의 경제 및 안보 협력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관계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한일 관계 개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현재 한미일 정부 모두 한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징용공 문제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두 문제 모두 이미 해결이 되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사죄와 배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한일 정부가 물밑 협상 중인데,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 일본 모두 국내 여론을 어떻게 납득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Q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주요 산업분야와 국제 통상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경쟁 관계(co-opetition)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면,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나요?

RCEP, CPTPP, IPEF 등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완성차가 양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팔리고 한국과 일본의 부품 업체들이 양국 완성차 제조사에 자유롭게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품질과 가격으로만 경쟁하게 되면 양국 기업 모두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프렌드쇼어링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완성차 제조사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국 부품사 납품을 늘린 바가 있고, 2019년 수출 규제 후에는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이 한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공급망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Q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공급망, 산업, 통상 측면의 협력을 위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민관협력 추진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대한상의에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보면 한국 기업의 다수가 한일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협력분야로는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협력'을 들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입장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 악화로 공급망이 훼손된 것은 양국 기업 모두에 손실이 되었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프렌드쇼어링의 추진은 공급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TSMC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니와 덴소가 출자하여 TSMC 공장을 구마모토에 설립한 것처럼 한국 기업에 납품하는 일본 기업의 국내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한국은 일본 기업에 거대한 시장입니다. 일본 기업

은 오래전부터 시장이 있는 곳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유인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에도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구직난이 큰 문제입니다.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는 일본의 구인난과 한국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면 인적 교류도 다시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일본 기업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제3국에서 공동 프로젝트(필리핀 일리한 전력 발전소, 요르단 IPP3 프로젝트 등)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도 많은데, 지난 수년간 이러한 협력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과거 전례에서 이미 시너지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에, 한일 기업간 공동 해외 진출도 다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